

#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
2. 건명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불임참조
4. 검토의견 : 불임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권태환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9년 1월 1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안이유

2007년도 하수도사용료 결산에 따른 인상요인 발생과 하수처리 시설, 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지속적인 투자재원의 필요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현행 하수도 사용요율을 평균 29.6% 인상 조정함(안제11조 제2항 별표1).

##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에 하수도 요금을 39.02%인상한 이후 5년여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지 못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지악화로 2007년도 결산결과 약 188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52.46%의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하수처리 톤당 총괄원가는 411.24원이나 사용료수입 톤당 원가는 269.74원으로 처리원가 대비 65.59%의 부족한 현실화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시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2008. 1. 21일과 3. 7일 2차례에 걸쳐 인상하려 하였으나, 서민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2009년도로 인상시기가 연기되어 하수처리시설 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타 광역시의 사용요금 인상,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현 사용료보다 52.46% 이상의 요금을 인상하여 처리원가의 보전, 시설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회계의 건전재정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을 볼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29.6%의 인상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중앙정부에서는 금년도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하수도의 재정적자를 사용요금 인상만을 통해 보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금 추가 확보 또는 하수도 시설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적자해소 등의 방안에 대하여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